

축산청의 신설

산림청이 농수산부로 이관 됨에 따라 농수산부의 명칭을 농림수산부로 할것이나 아니면 농축수산부로 할것이나를 놓고 화제가 되고 있다.

농수산부에서 개최된 축산자문위원회 에서도 어느 자문위원이 축산행정기구의 조직 인력을 확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도 되었다.

한편에서는 축산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축산관계 주간지가 크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축산행정기구를 대폭확장해야 되는 이

유로는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부문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제 처음 시작이라 그러하겠지만 축산청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좀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모든 축산인에 공감을 얻고 이것이 여론이 되어 정부에 건의가 될때 소기의 목표를 이룰수 있지않나 생각된다. 다만 외형이 이렇게 커졌으니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이성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오히려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외형으로만 따진다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쪽에 청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축산국장을 포함한 축산국 총직원이 타지수 보조원을 합하여 68명이고 이중 축산국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축산직은 생각보다 적어 일손이 부족할것이 예상 된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비스 해주어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산업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업체들이 박사 석사를 비롯한 고급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해외 기술교류도 많



아저 과거처럼 정부가 일일이 서비스 하는것은 낭비일뿐더러 정부의 손길은 세밀한곳 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 주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정부보다는 협회가, 협회보다는 개인업체가 양축가들의 가려운곳을 찾아서 긁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서비스는 가렵지 않는곳을 심하게 긁어 오히려 피부병이 생기거나 또는 옷위로 슬슬 긁어 감질만 나는 경우가 많은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통례이다.

우선 축산청이 생기기 까지 양축가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각종 통계는 축협조사부를 강화하거나 단기적으로 조사가 가능한것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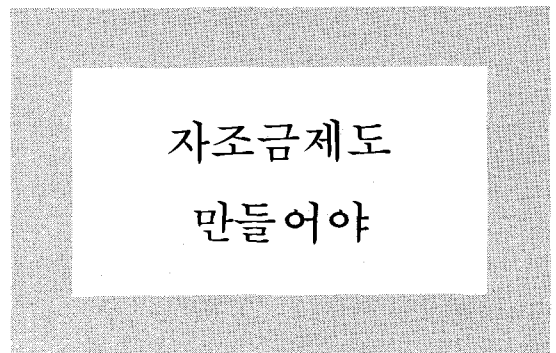
몇해전 협회에서 매월 초생추 출하수수를 조사하여 성공을 거둔것 등이 그예이며 계란과 닭고기의 규격 및 유통현황을 가금학회에서 조사한것도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하였기에 더 수월하였다.

다음으로 각종 규제를 대폭 자율화 하는 방법이다. 배합사료 원료구매에 각종 규제를 하고 축산업도 허가제등록제 등으로 하여 모든 부문에서 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위반자를 잡아내어 고발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등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것 들은 축산청이 생겨 인력이 남을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공자는 요순시대를 완벽하고 이상적인 행정체제로 떠받드는데 그 이유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행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에 장자는 요순도 실제로는 간섭을 안하는것처럼 하면서 간섭을 하였다고 비판하는것을 보면 정부의 하는일이 그리 쉬운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축산청의 많은 직원이 축산인들이 보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음지에서 뒷받침하고 일해나가려면 상당한 숙련과 기술이 필요할텐데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영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구가 총무부 경리부 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등 자체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부서가 사업부서보다 비대해지기 쉬워 축산청 설립 추진과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인것 같다.



몽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한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다. 협회나 조합 등 단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월간양계나 양계인들의 모임에서 흔히 강조되는 것도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뭉쳐야 한다는 말은 협회의 각종회의에서 자주 강조되며 아무리 강조해도 시비걸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회의이거나 긴박한 문제가 아니면 뭉쳐서 잘해보자고 결론을 내리면 무난하고 후에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어 편리하기 조차 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떻게 뭉쳐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토의가 되지 않는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대개의 경우 구체적 방법을 논하다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고 결정은 하고 어떻게 달것이나를 논하는것 같이 될까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뭉치는데는 우선 뭉칠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 소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대 가금협회 시대를 유기적 공존체제(有機的共存)라고 원로 양계인들이 그때를 그리워 하는데 매달 모여서 강의도 듣고 끝나면 각자 돈을내서 회식을 하고 이때는 양계외에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즐거움이 화제가 되어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있었다.

그후 외국계가 수입되면서 품종별로 협력회 협의회 등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간접적 공존(間接的共存)시대가 이어져 왔다. 74년도의 외국계 수입금지와 77년의 수입 재개 및 각종 규제와 완화의 되풀이 속에서 양계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양계인들 끼리 서로 만나야할 진정한 의미가 상실되어가 공존의 시대에서 병존(併存)의 시대로 바뀌어 왔다.

효율과 능률만을 강조하다 보니 산업전체에 주인의식이 희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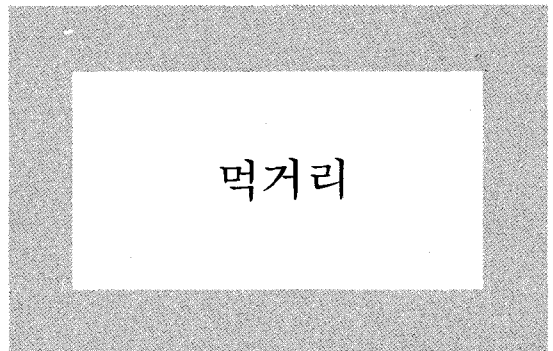
이제다시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기적 공존체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 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를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조금제도를 통하여 병존이 공존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들이 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고 직원들이 유기적 공존을 하는데 비하여 서구의 경우에는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작업의 질과 결과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의 질이 차이가 나듯이 우리 업계도 공존의 시대로 되돌아 가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한나라의 언어를 연구하면 그사회의 문화 배경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도 이러한 것에 있다. 더군다나 말의 어원을 찾아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나 신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량이란 말의 어원은 식용 곡물을 뜻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에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그저 추석이나 설때나 맛을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는 양곡이 대표하게 된 것도 이해할 만 하다.

70년대에 와서 축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수산부는 축산물을 광의의 식량이란 말로 표현하기 시작 하였다.

왜 식량이란 말을 과감하게 못 버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식량수급정책이란 말때문에 협의의 식

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진흥청 산하 각도 시군 지도소 및 도·군·면의 전공무원이 모심기 때만 되면 총동원되고 그외에도 학생 군도 지원하고 예비군 민방위도 농번기에는 연기 된다. 지원기관도 농업진흥공사 농산물 검사소 농업자재 검사소 종자공급소 농지개량조합 등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총동원하여 소위 식량을 5백만ton 정도 생산하는데 축산은 이미 지난해 배합사료 생산량만도 6백만ton을 넘었다. 산업의 특성도 있지만 한편 축산물이 아직도 식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름진 곳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김민환옹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거리 연구회를 만들고 식량대신 고유의 우리말인 먹거리(먹을거리)란 말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펴와 이제는 한글 사전에도 먹거리란 말이 수록 되도록 까지 되었다.

먹거리란 말은 이들 먹거리 회원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말이 아니고 우리조상들이 사용해온 말이다.

지난 6월 양계인들이 동경의 신바시근교의 교포식당 토사가(불고기집)에 간적이 있었다.

60이 가까운 이집 주인은 16세때 제주도 고향을 떠나 일본에 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먹거리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말을 하였다. 이 교포가 어려서 살던 제주도에서는 먹거리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이번 김민환 회장이 먹거리란 책을 자비로 발간한 것을 축하하며 먹거리란 말이 널리 사용되어 축산에 대한 국민 모두의 개념이 바뀔때 축산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종계장에서 부터 추백리를 박멸하자

*추백리 진단액 구입문의 : ☎ 752-3571~2